

빅브라더 '코로나 행정부'...우리 사생활은 안전한가?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보편적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협

송경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 2020-09-21 10:24:09 |  
2020-09-21 10:24:10

고대 정치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치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치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이 일치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조화일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현대 국가에서 이를 조화하기는 쉽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가 현대에 주목받는 이유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제기된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권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코로나19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각 국가는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집회 결사와 종교활동의 제한, 이동의 자유 축소 등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경우, 초기 방역 과정에서 혼란도 있었지만, ICT(정보통신기술) K-방역과 성숙한 시민 의식에 힘입어 다른 국가에 비교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선제적 K-방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대표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와 같은 시민권 침해와 지나친 행정 권력의 강화 움직임, 기업에 의한 위치정보 등의 무분별한 공개 등 비민주적인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코로나19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부터라도 간과했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은 공동체의 안전과 시민권의 조화를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강화 등이 있을 것이다. (필자)

한국 2500명당 1명꼴 감염

2020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코로나19(COVID-19)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동향과 방역 상황을 보는 것은 일상사가 되었다. 한국인의 일상에서 10시만 되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도 익숙하다. 한국의 코로나19 현황은 9월 14일 현재 2만2285명이 감염되었다. 전 국민으로 환산하면 2500명당 1명꼴로 감염된 상황이다. 여기에 무자각 감염자를 더하면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전 세계적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알려주는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 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Johns Hopkins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는 9월 14일 기준 2889만281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사망자도 92만2525명으로 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반기 1차 팬데믹은 알지 못한 감염병의 공포에 속수무책 당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의료정보를 가지고 준비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2차, 3차 팬데믹은 잠재되어 있고, 근본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당분간 코로 19는 우리와 같이 공생할 분위기다.

### K-방역이 불러온 논쟁

한국은 코로나19가 대량 감염된 중국과 인접하고 교류가 활발한 영향으로 코로나19에 무방비 상태였다. 거기에 대구 신천지 교회, 이태원 클럽, 광화문 집회 관련 재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감염자 수가 2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초기부터 시작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기반의 K-방역이 정착되면서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에 치료제나 백신개발 이전까지 관리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ICT를 활용하여 비대면 진단에서 드라이브 스루 도입, 인터넷 제안을 통한 공공 마스크 제도, 검사장비와 결과의 신속한 문자정보 제공, 재난 문자 시스템 구축, 스마트 폰 및 카드이용 조회, GPS 추적, CCTV, 대중교통 이용, 자가격리 앱, 빅데이터 활용 등의 수많은 ICT기반 방역체계가 있었다. 전통적인 공공의료 체계에 ICT가 결합되어 진단, 추적, 격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런 성과로 미국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한국의 사례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코로나19에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ICT 방역과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그리고 시민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국가로 평가했다.

이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K-방역의 핵심 ICT의 적극 활용이다. 감염경로 추적기법과 감시 체계 구축에서 빅데이터와 GPS 추적, 스마트 폰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감염자 동선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방역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이 성과를 거둔 것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 방역 과정이었다. 당시 ICT를 활용하여 클럽 방문자 5517명의 인원을 확인했고, 클럽에 30분 이상 방문자 5만7536명을 파악하여 검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빅데이터와 스마트폰 위치추적, 사회연결망 분석 등을 활용한 방역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초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한국의 ICT 활용 방역에 몇몇 우려의 목소리도 등장했다. 비판은 외부에서 시작되었다. 핵심 내용은 민주주의 기본권이 방역 과정에서 제한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가 지난 4월

6일 발행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는 한국의 ICT 활용 개인정보 추적 시스템이 심각한 개인 감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12일에는 프랑스 정부 과학자문위원인 감염병 학자 드니 말비(Denis Malvy) 박사가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다. 유럽 차원에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이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정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구식 개인주의 가치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 제기는 단순히 프라이버시에만 한정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서 단순한 효율성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 네트워크사회로 진입하면서 ICT를 활용한 감시 우려감은 시민의 자유권 침해 관점에서 계속되었다. ICT가 통제되지 않는 초국적 기업이나 국가를 시민이 감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도 가능하지만,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 강화를 위한 시민권 제한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에 관하여 카스텔(Castells)은 ICT가 정치와 행정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와 초국적기업의 무절제한 독주를 감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오래전에 경고했다.

그리고 현실에서 테러·전쟁이나 미지의 질병으로 인한 공포는 국가의 시민 보호를 내세운 ICT 감시와 통제 강화라는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이라 불리는 '애국법(USA PATRIOT ACT)'이다. 정보 네트워크 사회에서 이미 테러 대응책으로 다양한 감시 도구가 발전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테러리스트 정보를 공유하거나 인터폴의 수사 능력 강화를 위한 협조가 진행되었다. 미국에서는 반테러의 명분으로 GPS, 인터넷, 스마트 폰, CCTV 및 IC 카드의 광범위한 사용과 결합하여 개인 감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2005년 7월 52명을 숨지게 한 런던 7·7 지하철 자살폭탄 테러에서 CCTV를 활용해 용의자를 검거함으로 런던의 감시 체계에 대한 우려감도 대두되었다.

▲ 정부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여부를 오후 발표할 예정인 20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가게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수도권의 경우 2단계가 오는 27일까지 유지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는 이날까지로 잡혀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3가지 위협요인

정보 네트워크사회에서 테러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민 감시의 문제가 대두되었다면, 이제는 감염병으로 인한 감시가 부각되었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종교 및 집회의 자유 등 시민권 침해, 강력한 정부 통제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코로나 19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ICT 활용의 방역이 지나칠 경우, 사생활 침해나 감시, 개인의 자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둘째, 스마트 기기에서 위치 정보 제공 기준과 부작용 등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민주주의 권력 분립이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에 관한 대응의 미비이다.

첫째, ICT를 활용해 국가의 사전적인 방역 활동이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집회결사·종교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방역 당국은 초기부터 스마트폰, 신용/교통카드 이용, GPS 추적, CCTV, 대중교통 이용, 자가 격리 앱,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선제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동선 공개 등 위치 정보를 포함한 상당한 정보를 중앙집중식 추적체계로 관리했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 개인정보 노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자칫 사생활 침해와 감시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대미문의 감염병 유행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시민권을 강조하는 가치의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을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상 상황이라는 기간의 설정에서 일부 개인의 시민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공포를 확대하여 개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도 없다.

이미 팬데믹으로 인한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이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넘어서 종교집회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지에서는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3월부터 봉쇄(lockdown)가 진행되면서 강제적 규율이 일상화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움직임으로 자유권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시민권 사이에 긴장이 발생한 것이다. 이 문제는 단기간의 방역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가 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민권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개인이 방역목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기기 위치 정보 제공과 폐기 기준에 대해 모호함이 존재한다. 정보의 자기통제권이 무시되고 개인의 모든 정보가 지나치게 기업이나 시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그동안 빠른 ICT 발전 속도에 가려져

있었지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기업들(특히 단말기 및 앱 개발사)은 지나치게 개인의 위치 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심지어 앱 설치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설치가 안 되는 강제적인 방법도 적용하고 있다. 카드, 게임, 온라인 마켓, 운동, 건강정보를 간단한 동의만으로 기업들에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한 셈이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의 동선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를 몰래 별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했다. 실제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하는 상점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매일 늘어나는데, 쌓이는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 폐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내가 기업이나 식당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나중에 어떻게 악용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터넷 거래시장에서 나의 전화번호와 개인정보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코로나19가 빅브라더(big brother)를 만들 위험도 존재한다.

셋째, 코로나19로 야기된 또 다른 쟁점은 지나친 행정 권력의 강화이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지배를 지칭하지만, 실제적인 통치행위는 행정부가 담당한다. 특히 전쟁이나 테러 등의 위기 상황에서 행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은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중앙집중형 리더십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권력 분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 방역과 검사, 신속한 의사결정을 의한 컨트롤타워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행정 권력의 남용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 이후에도 경제침체, 고립주의 강화, 대공황, 파시즘이 등장한 바가 있다. 위기와 공포에 대한 대응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할 경우의 혼란은 그 대가가 크다. 물론 100년 전과 비교해 시민 의식과 민주주의 수준은 큰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행정권이 과도하게 강화된 것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테러와 같은 비상 상황과 함께 미래 예측되는 자연 재난이나 감염병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행정권의 남용과 견제 장치 그리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도 자문과 협의체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행정부와 정당, 종교계, 전문가 집단, 시민 등이 참여하는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좀 더 체계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지나친 행정권의 강화가 아닌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결정력을 가진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초유의 감염병으로 인한 긴급상황에 초반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이성을 가지고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치와 거버넌스의 부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단기적으로 행정권에 일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최소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정당, 지방의회 등 정치권만이라도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거버넌스 체계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데, 구성면면은 본부장 국무총리, 1, 2차장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질병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체계이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전문가, 지방정부, 교육청 등 행정협의체 수준의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된다면 행정부만의 힘으로는 버거울 수 있다. 행정부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이 든다면, 시민사회, 학계,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의 힘을 빌려야 한다. 그럴 때 정부통제가 아닌 자율적인 위기 대응 거버넌스 속에서 정치학자 로버트 달(Dahl)이 강조한 민주적 권위(democratic authority)가 강화될 수 있다.

###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이익 조화

지구적 네트워크가 구축된 현대 사회에서 전쟁, 테러, 전염병으로부터의 위험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 네트워크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상호의존성을 강화한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런시먼(Runciman) 교수는 미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호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쿠데타, 대재앙, 그리고 정보 권력이다. 2018년에 그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 내부의 쿠데타와 코로나 19와 같은 대재앙, 그리고 가짜뉴스로 야기된 정보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의 선지적인 통찰력은 2년 뒤인 2020년에 그대로 적중했다. 그는 현대 상호연결된 세계가 편리하지만 전 세계적인 감염병에 더 취약해졌고, 여기서 발생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21세기식 디스토피아가 나타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두려움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ICT 감시사회를 만들 것이라 경고했다.

앞서 제기한 코로나 19가 야기한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을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 대응은 갑작스러워 우왕좌왕했지만 이제 장기전을 준비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고민해야 한다.

향후 코로나 19가 제기한 민주주의 위기는 단순히 일국 차원의 민주주의 가치의 논쟁을 벗어나 국제정치 차원에서도 새로운 정치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 가치 차원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지향점의 차이에 관한 고민이 요구된다.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시민권을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국가나 기업에 의해 지나치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완할 제도적 입법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지 빅브라더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민권과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조치에서 의회의

논의를 거친 법 제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는 국가 질서와 공동체적인 가치를 우선에 두고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학계,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는 테러, 감염병, 지진재난 등의 공동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교육의 중요성도 재확인해야 한다. 시민의식을 더는 개인의 소양이나 준비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 19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공적인 영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의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전쟁, 자연재해, 테러, 지구적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시민의식을 고양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은 일시적이지만 인류는 앞으로 이 지구상에 더 오래 존재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류가 만든 가장 성공적 정체(polity)인 민주주의도 진화해야 한다. 변화발전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새로운 상황, 변화된 시민의식에 따라 민주주의는 개선하고 진보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19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집합을 만드는 것이 남아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공동체 보호에서의 균형이 필요하고, 시민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민권을 보장받는 정체이다. 미래의 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서의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법 제도적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권리와 국가 공동체의 안전 사이의 공통분모를 넓히는 것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 19의 위험을 기회로 활용하여 미래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이유이다.

송경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코로나 때문에 재점화된 프라이버시 논란, 그리고 ‘언잇엑트’

| 입력 : 2020-05-27 09:16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코로나 때문에 빈번해진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추적 조사 덕분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및 도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구에 따라 10배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메신저 보안 전문 업체인 위커(Wickr)의 예상

위커가 사용자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터키, 이스라엘, 헝가리 등 중앙 정부에서 확진자 이동 경로와 접촉자 추적 조사를 진행하는 국가에서는 비밀을 보장해준다고 알려져 있는 메신저 앱의 설치 비율이 15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가 강력한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런 도구들의 도입 비율이, 비중앙화 시스템을 고수하는 독일에서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무엇을 뜻하는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강화된 정부의 추적과 감시 시스템에 대해 염려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위커의 CTO인 크리스 하웰(Chris Howell)은 “코로나 감염자를 추적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 된 지금 시점에서 프라이버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정부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데이터를 집어삼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개개인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나선 것입니다.”

위커가 조사한 것만 보면 정부의 검열 행위 -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해도 - 에 대한 반작용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일반 대중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추적 행태를 반영한다’는 뜻이 되지는 않는다고 위커는 강조했다. 오히려 이런 염려가 일어날 정도로 코로나 퇴치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치열하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하웰은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흐름 때문에 ‘프라이버시 vs. 공공 안전’의 오랜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법 쪽에서도 이런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언잇엑트(EARN IT Act)’라고 불리는 법안이 최근 각종 비판과 옹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회는 위원회를 결성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업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모범 실무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여기에 암호화를 깰 백도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면, 암호화는 정부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우려하며 언잇엑트를 비판하고 있다.

전 CIA 및 NSA 국장을 지냈던 마이클 헤이든(Michael Hayden)은 더힐이라는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며 “백도어들은 보안과 암호화 모두에 있어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백도어를 갖춰야 한다는 쪽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언잇엑트가 좋은 사례”라고 쓰기도 했다.

위커의 하웰은 “프라이버시 보호 도구의 도입 비율이 터키에서는 45배, 이스라엘에서는 23배, 헝가리에서는 15배 늘었는데, 물론 애초에 그런 도구를 사용해왔던 사람의 수가 워낙 적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러시아, 이탈리아, 대한민국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9/11 사태 이후 미국이 보안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당시 미국은 테러리스트 공격을 막겠다며 각종 프라이버시 침해 장치를 사회적으로 도입했고, 대중들도 이에 별 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되돌릴 방법이 없었고, 이 때문에 ‘스노든 사건’ 같은 것이 먼 훗날 일어나게 된다.

현재 확진자 접촉 추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중앙 정부가 직접 이를 집행하는 것이다. 확진자는 물론 그와 접촉한 다른 개인들의 위치 정보를 정부가 다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분산형 확진자 접촉 추적(distributed contact tracing)이다. 일정 거리 안에 특정 시간 동안 함께 머무른 전화기들끼리 익명화 처리된 키를 주고받도록 하고, 그 키들 중 확진자의 전화기에서 나온 것이 있을 때만 키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되는 방식이다.

하웰은 “두 가지 추적 장치가 동시에 발동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9/11 사태 이후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 때는 정부가 달라는 대로 모든 데이터를 다 넘겼죠. 그것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었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애플과 구글은 ‘분산형 확진자 접촉 추적’을 위한 도구를 함께 개발해 정부 기관과 의료 기관에 배포하기도 했다. 대만과 독일도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선에서 확진자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및 사용 중에 있다. 하웰은 “지금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자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움직이는 국가들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 더 큰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명목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웰은 “최소한 선택지라도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래야 사태가 진정되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검토될 때 ‘그래도 정부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고 하긴 했다’는

근거가 생깁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를 박탈하고 오로지 중앙 정부가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때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당시 정부의 의도가 선했는지 악했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방역과 프라이버시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 기술 나온다

이고은 팩트체커 승인 2020.06.16 10:14

### K방역의 딜레마 '사생활 침해' 대응법의 진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성공적으로 평가받은 데 큰 몫을 한 것은 바로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이동 경로를 방역당국이 투명하게 공개한 점에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일부 침해하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공공의 건강권과 안전을 우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부터 정부는 노래방이나 실내 집단 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성소수자 아우팅’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된 용인 66번 확진자의 경우, 동선 정보의 성격과 이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가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기지국 기반의 GPS 위치정보,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는 방식을 정책화한 것 자체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 공개는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일정 기간의 출입국 관리 기록, 그밖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등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근거를 제시한 제76조의2 제1항과 제76조의2 제2항이 있다. 제34조의2 제1항은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했던 자가 취득한 정보를 악용하는 일을 금지하고 정보당사자를 특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59조, 업무가 종료되면 감염병 관련 업무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파기해야 함을 규정한 제76조의2 제7항 등이다.

그동안 이러한 법조항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확진환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라”면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14

일 “노출자 신속 확인을 위한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건물, 상호명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물론 초기에 비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비교적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안전을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느 정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QR코드 수집 역시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어서,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확진자 동선 정보 수집에 더해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한다는 이유로 방역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중시하다가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그 반증이다. 대신 해외에서는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파악하되, 한국처럼 GPS 기반으로 절대 위치를 수집하기보다 블루투스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와 확진자의 상대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트레이스 투게더’, 호주의 ‘코비드세이프’ 등이 대표적이고, 미국의 구글과 애플도 블루투스 기반 앱을 공동 개발 중이다. 블루투스를 활용하는 경우 절대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상대 위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방역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방역 효과를 높이려면 어플리케이션 사용율이 일정 수준 이상(국민의 6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기기의 전력손실율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공안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없을까? 국내에서도 확진자 정보를 파악하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카이스트 한동수 전산학부 교수팀은 지난 10일 스마트폰에만 동선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방식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의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관성 센서 신호를 1~5분 단위로 주기적으로 수집해 기록하며, 동선 공개 과정에서 장소 정보가 아닌 신호 정보를 공개해서 확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해당 정보들은 2주 뒤 자동 폐기된다.

지난 10일 과총과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주최로 열린 ‘코로나 이슈와 사이버 안전’ 포럼에서도 ‘동형암호’ 기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연산(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암호기술로, 암호를 풀고 데이터를 꺼내는 순간 위험에 노출되는 암호기술과 달리 이용하는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된 상태로 사

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표자로 나선 조지훈 삼성SDS 보안연구센터장은 “앱 사용자의 암호화된 위치정보, 확진자의 암호화된 위치정보를 비교해서 겹치는지 확인하고, 그 정보를 사용자가 100% 컨트롤할 수 있다”면서 “소수의 사용자라도 개인이 확진자 동선 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T 보안 전문가들은 사이버 보안과 안전기술은 이미 일정 수준 발전해있다고 평가한다. 이 포럼에 참여한 홍석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는 “학계에서는 이미 많은 암호기술이 존재하므로 환경에 맞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두식 KISIA(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도 “기업이나 기관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공감대와 정부 정책 뒷받침된다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이버 환경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만큼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정책에 무게를 기울이고 투자한다면 충분히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사태, 공공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딜레마 부상

나지영 기자 승인 2020.05.15 19:05 댓글 0기사공유하기

한국, 신속한 검사와 격리 위해 위치정보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활용

동선 추적, 방역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

공공의 알 권리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딜레마 부상

[바이오타임즈] 인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다. 코로나19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아직까지는 비약물적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로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한국을 비롯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발생한 나라들은 확진자 격리 조치와 동선 추적 등으로 초기 방역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완화와 억제 전략 선택

코로나19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잠복 기간이 있다. 이러한 변수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완화와 억제 전략(strategies for mitigation and suppression)을 택했다. 학교 휴교, 재택근무, 집단 행사 취소,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등 다양한 방역 조치를 취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바이러스 발생 곡선을 평평하게 만드는(flattening the curve) 전략을 수행한 것이다.

한국은 감염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격리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확진자의 위치추적 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등을 활용했다. 역학 조사는 확진자와의 면담으로 격리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얻는 것이지만, 내용이 보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처의 디지털 정보가 필수다. 역학 조사관들은 디지털 정보를 통해 접촉자의 진술에서 의미가 있는 역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격리대상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확진자의 기억 오류나 거짓 진술 등 진술 정보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면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는 데 보다 수월하다.

동선 파악은 개인의 정보인 동시에 역학 조사를 위한 정보다. 때에 따라 이러한 정보는 다른 접촉자나 대중에게 공개된다. 물론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어렵지 않게 개인 신원이 밝혀질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한국을 비롯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발생한 나라들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광범위한 추적이 가능한 솔루션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블루투스 기술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도 활용되고 있다.

백신 없는 현시점에서 확산 억제는 비약물적 중재조치로 추진

코로나19는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임상 시험이나 시판을 위해서는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린다. 현시점에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은 비약물적 중재조치가 유일하다. 비약물적 중재조치는 감염 의심자 검역 및 확진자 격리, 주기적인 소독과 마스크 같은 개인보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착용 필수화 등 엄격한 조치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다.

검역과 격리는 바이러스 유행 시 흔히 취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다. 영국의사협회지(British Medical Journal, BMJ)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에 대한 검역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보다 44~81%의 감염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사망률도 31~63% 정도 낮출 수 있다.

한편, 바이러스에 노출된 접촉자는 먼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되고 이후 거주지역의 해당 보건소의 관리하에 자가 격리를 시작하게 된다. 자가 격리 기간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다. 해당 보건소는 격리자의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일일 2회 전화로 발열 등 이상증세가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방역당국, 밀접 접촉자 파악 위한 역학조사 진행

밀접 접촉과 감염은 관련이 깊다. 이를 설명하는 데이터는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임상적 소견(clinical presentation),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속도를 수치로 나타낸 기초재생산수(basic reproduction number), 2차 감염률(secondary infection rate), 바이러스 잠복 기간(incubation period) 등이 있다. 또한, 증상발현에서 격리까지의 시간, 전염 가능한 지리적 경로, 접촉자를 추적할 수 있는 확률 등이 모두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동선 추적은 방역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치다.

한편, 역학 조사 프로토콜은 질병 사례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조치다. 이 조사 프로토콜은 감염 의심자의 검체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면서부터 시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 의료 자원을 동원해 감염사례를 관리하고 확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조사 프로토콜은 잠재적 고위험군에 대한 위험 평가처럼 특정 집단에 좀 더 구체적인 접근 방법과 역학적 매개변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변용될 수 있

다.

검체 진단검사 후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역학 조사관과 일대일 심층 면담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역학 조사관은 확진자로부터 언제 증상이 발현되었는지, 그 장소는 어디인지 등이 역학 정보를 진술받게 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조사단계에서 확진자의 진술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정보 사용을 통지한다. 발현 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의 카드사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 CCTV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한다. 특히 지리적 특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 위험이 과소 혹은 과대 평가될 수 있기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다.

‘접촉’은 감염의 또 다른 이름이다.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특정 거리 내에 이동하는 비말을 통해 전염된다. 밀접한 접촉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에 영향을 준다면, 밀접 접촉자의 동선 추적은 감염자와 접촉된 사람을 분리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접촉자의 추적 데이터는 검체 진단검사 횟수에 영향을 준다. 검체 진단검사 횟수가 증가하면 전염이 통제되어 확진율은 낮아진다. 국내의 경우 2020년 4월 15일 기준 누적 검사 534,552건 중 누적 확진율은 2%로 이전보다 감소했다. 무증상 감염자까지 광범위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확진율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은 2차 감염 피해를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내의 이러한 데이터는 진단키트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유증상 감염자 또는 중증자에게만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와 대비되는 점이다.

데이터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대두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2020년 3월 14일 이후부터 직장명과 세부 주소는 공개하지 않는다. 반면, 이동 수단과 탑승 일시, 탑승 장소, 접촉자가 발생한 시간대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기간은 증상이 나타난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개인 정보 공개 이후 사생활 침해와 영업 손실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한편으로는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가 역학적 매개변수를 고려했을 때 계속 변경될 수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딜레마다.



국내는 2020년 4월 기존 역학 조사 방법보다 밀접 접촉자 분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보건당국이 여러 기관에 각각 요청하거나 확인해야 했던 정보들을 확진자의 동의에 따라 한꺼번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의 스마트폰이 15분 단위로 생성했던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의 생성 시각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러시아, 인도 등 28개국 이상이 스마트폰의 GPS 또는 블루투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술적, 법적으로도 노력 중이다. 블루투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밀접 접촉자의 추적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자발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며 매일 새로운 암호를 부여해주고, 잠복기(14일)가 지나면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정보는 동의에 의해서만 공개가 가능하다.

코로나19는 인류 역사에 있어 유일한 팬데믹 바이러스가 아니다. 기존의 바이러스도 팬데믹으로 심해질 수 있고, 이후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며, 바이러스를 추적할 때 개인의 동선도 자동으로 추적되는 게 당연해질지도 모른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잠재우기 위해 위치 정보나 블루투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역 조치를 검토 중이다. 다만 아무리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일지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방식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 데이터 저장 기간 제한,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원회와 전문가들은 정부나 개발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프로토콜로 글로벌 역학 조사 역량을 갖춰야 할 시점이다.

[바이오타임즈=나지영 기자] jyna19@biotimes.co.kr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 첫 감염자가 확인된 후 현재까지 총 1만3천여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다. 확진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동경로, 이동수단,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전염병 사태 이후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확진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법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법적절차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사생활보호와 관련하여 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권과 관련하여 제10조에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보호 vs 국민생명권'과 같은 기본권이 충돌되는 경우 우리나라와 독일의 학계는 '생존권 우선의 원칙'을 법익 형량의 원칙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즉,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권은 경제적 기본권 등 그 밖의 법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이론을 떠나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전세계적으로 60만명에 넘어선다는 점에서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이유일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1만여명 이상의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코로나 감염 예방과 연관성이 낮은 확진자의 직업, 나이, 주소, 직장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으며, 신천지교회와 이태원클럽 집단감염시 종교적 이슈와 동성애 등의 문제로 확진자가 스스로 동선을 숨기거나 해당 지역에 방문한 밀접접촉자를 식별하는 것이 어려웠던 문제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중앙대책본부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해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거주지 세부주소, 직장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위해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으며 '익명검사제'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를 유도한 바 있다. 8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어 출범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감염병 관련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이의신청 범위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의 개선을 기대해 본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시기이며 심지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회없이 살아갈 수 없으며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하며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언택드

(Untact) 사회라 하더라도 사람간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간 관계 방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특히 확진자의 동선공개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비방과 혐오는 코로나 극복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방역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며 더불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메랑이 되어 각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의 마음의 필요한 때이다.